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2년 12월 Vol.220

[현안] 적기지 공격능력보유 선언 기사다 정권 규탄 기자회견문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국방예산
[2022년 청년평화아카데미] 공주/논산/광주/서울



신냉전 조장, 세계 평화 파괴하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반대!

미국과 손잡고 한반도 동북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일본 규탄!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결사 반대!

국제법, 일본 정권은 한반도 동북아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

일본의
결사 반대!

일본의 공격능력 노린
일본의 3대 안보문서
폐기!

타무나오는
일본도 공격능력
결사 반대!

일본의 공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

일본의 공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

일본의 공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

<일본의 3대 안보문서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기사다 정권은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선언을 철회하라!
(반격능력)

• 일시 및 장소 : 2022.12.19일 (월)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누리 통일누리

12월 19일(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기시다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하영



[현안]

- 01 [기자회견문]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 14 [2023 국방예산 문제점]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국방예산-위협 해소는커녕 확대된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들어



[2022년 청년평화아카데미]

- 17 공주대학교에서 한국원폭피해자와 한반도 핵문제를 알리다! / 이애지, 금소영
- 20 기후위기시대, 핵문제와 먹거리 문제 :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 강효민
- 23 전남대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다 : 기억하는 청년들의 연대, 반핵 평화로 한걸음 / 구가연
- 25 어흥! 성공회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 '힘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기 / 김채린



[지역소식]

- 28 광주 / 목포 / 나주 / 해남 / 김제 / 군산 / 논산 / 부천 / 대구 / 대전충청 / 성남용인 / 보령 / 부산 / 익산 / 서울 / 인천



[회비와 후원금]

- 38 감사합니다

[결산보고]

- 40 2022년 11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일본 기시다 정권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하여 소위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하였다. 이는 아베 정권의 해석 개헌(2014.7.1.)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천명과 함께 자위대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40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배와 구 일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은 미국의 요구를 좇는 것이자 한반도 유사시 주일/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연계되고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장사정

<편집자 주> 지난 12월 16일 일본 기시다 정권이 3대 안보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의 재침략을 노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평통사의 규탄 기자회견문을 실는다.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것이자 한반도의 출병 가능성을 높여 전쟁 위기를 부추기게 돼

공격무기 도입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자위대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출병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사용”(연합뉴스, 2022.12.16.)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가 갖는 불법성을 호도하고 이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세계평화세력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기시다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으로 점철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한반도 출병 기도를 철회하라!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자위대는 북한이 대일 공격 징후를 보이거나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음이 확인됐을 때”(연합뉴스, 2022.12.16.)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소위 존립위기사태 하에서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미국 함정 등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곧 일본이 아직 북한의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적의 선제공격이 있기 전에도 적을 공격한다는 것으로 그 만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높이며 일본이 침략국으로 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에 대한 공격 의지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신 3요건’-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다른 수단이 없으며, 필요 최소한으로-이 충족되면 일본이 공격”(일 참의원 속기록, 2015.7.8.)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 나카타니 방위상은 “밀접한 관련국이 선제공격을 해 보복으로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일본이 밀접한 관련국을 지원하는 무력행사를”(일 중의원 속기록, 2015.5.28.)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다만 절차 문제만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은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석열 정권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이나 존립위기사태법에 관련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기시다 정권의 호의를 기대한 것에 대한 일본의 냉정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집단자위권 행사는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자위대가 한반도 역내외에 재출병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돼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행사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과 침략 가능성을 높인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NHK, 2015.5.24.)며 자위대가 남한 영역에 들어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출병할 수 있는 길은 평시부터 한반도 유사에 걸쳐 다양하게 열려 있다. 자위대는 평시에도 자위대법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 함정 방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감시, 주일/주한미군과 한국군 이지스함 경호, 한미일 연합훈련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평시라고 해도 지난 11월 초의 한미일 연합 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 후 북한의 무력 대응·속초, 울산 공해 상의 미사일 발사·이시사해준 것처럼 한미일 함정이나 전투기가 피격당하면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미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중요영향사태가 선포되면 자위대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의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역내외로 재출병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 후방 지원의 일환으로 탄약과 항공기 급유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동안 비전투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미군 지원 임무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제거됨으로써 전투가 잠시 중단된 전방 지역에서의 지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군을 지원하는 자위대가 미군을 따라 남한 영토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 선포에 따른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자위대가 한반도 역내에 출병할 수 있다. 설령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전쟁 때처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다. 더욱이 박근혜 전 정권처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용인하거나 대선 토론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한 윤석열 후보가 집권 중에 같은 입장의 정책을 편다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축해 양안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동북아 전략안정과 평화를 파괴할 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노리는 일본의 지역 패권 야욕을 규탄한다!

기시다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구축으로 한반도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 못지않게 대만해협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은 분명 대북 선제공격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이라는 현상변경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만해협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은 이른바 대중 억제와 봉쇄, 곧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뒷배삼아 동북아 군사적 패권과 지역 맹주 자리를 꺾차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일본이 노리는 것은 차이는 없다. 대만해협 개입을 위해 일본이 우선적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하고 대만해협에 가까운 요나구니섬 등 오키나와 부속 섬들의 공항, 항만시설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그러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구축으로 양안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것은 1970년대 이래 중일 양국이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 쌓아 왔던 우호선린관계를 파괴하는 역사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중일은 미중 관계 개선을 좇아 국교정상화를 선언(1972.9)하고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1978.8)해 양국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일본은 1988년의 중일공동선언에서 “중국 침략으로 중국 국민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한다”고 반성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미일이 중국과 합의-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한 대로, 하나의 중국이며 따라서 양안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다. 그런데도 기시다 정권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양안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일본이 중국 침략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재차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의 전략안정과 평화를 파괴할 뿐인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시다 정권이 국방예산 대폭 증액하려는 것은 본격적인 대중 군비경쟁으로 지역 패권과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의 발로

기시다 정권은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공세무기 도입과 군비경쟁을 멈춰라!

기시다 정권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장거리 공세무기 도입을 위해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무려 26%나 증액시킨 6조 8천억 엔(약 65조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향후 국방예산을 현행 GDP 대비 1% 안팎에서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2%대로 2배나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국방예산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부대도 창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국방예산을 1년 만에 26%나 대폭 늘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일본도 결코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줄여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 간 일본 주변 안보 관련국들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현지 화폐 기준으로 미국 1%, 중국 9%, 러시아 9%, 한국 5%, 북한 12%, 일본 2%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관련국 중 국방예산 연간 최고 증가율은 현지 화폐 기준으로 2015년 러시아의 20%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분쟁과 크림미아 합병(2014) 등 준전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일본 열도에 대한 북한, 중국과의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기시다 정권의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 증가율 26%와 이후 5년 동안 매년 14%에 달하는 증가율은 비정상적인 것이 틀림없다.

이에 기시다 정권이 국방예산 대폭 증액 요인으로 북한, 중국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고 있으나 실은 본격적인 대중 군비경쟁으로 지역 패권과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의 발로라는 것은 앞서 밝힌 대로다. 이에 우리는 기시다 정권이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의 준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희망!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과	
2011년 11월	오바마 정권 아시아 재균형 전략
2012년 1월	오바마 정권 신 국방전략
2012년 6월	한일 지소미아, 한일 ACSA 체결 시도
2013년 9월	아베 정권, '적극적 평화주의' 천명
2014년 7월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4월	2015 미일 방위협력지침 발표
2015년 9월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아합
2016년 2월	사드 한국배치 결정
2016년 3월	일본 안보법제 발효
2016년 11월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22년 12월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선언

적기지공격 능력 구축을 선언한 기시다 정권과 이를 적극 환영한 바이든 정권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평소 방공·미사일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에 자위대의 적기지공격 능력을 반영하고 양안 분쟁 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역할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선언의 후속 작업이다.

그러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한반도/양안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군국주의적 팽창과 침략으로 파멸을 면

치 못한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이자 구냉전적 대결을 능가하는 신냉전적 대결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 끝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이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또다시 일본, 한국, 중국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인류로부터 평화와 희망, 번영을 빼앗는 전쟁과 공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기시다 정권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중단하고 역사가 교훈으로 준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생명과 자산, 평화를 지키길 바란다. (2022년 12월 19일)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국방예산 - 위협 해소는커녕 확대된 안보 딜레마의 높에 빠져들어

임기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국방예산이 57조 143억 원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도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3.8% 포인트 감소한 5.1% 증액률로 편성하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오히려 1% 포인트 늘어난 4.4% 증액률을 적용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아랑곳없이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2023 예산과 국방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가율	전년도 증가율
전체예산	638조7천억 원	5.1%	3.8%p 감소 8.9%
국방예산	57조143억 원	4.4%	1%p 증가 3.4%

이전 정권처럼 윤석열 정권도 북한위협을 국방예산 팽창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로부터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은 이미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과 도발,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대결과 강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대북정책에 매달리며 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 고성능 공세 무기를 도입하면서 숨 가쁜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팽창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안보 딜레마의 높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하며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 바탕에 윤석열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23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통사의 삭감 의견서의 총론 중 일부를 실는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다. 이후 발간할 '평화누리 통일누리'에도 주요 항목별 삭감의견서를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꼭지에서 다룬다.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국방예산 팽창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단죄까지 하는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보 공약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며 대결적인 대북 안보관을 주저 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가 취임한 후 한미연합연습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다자연합 연습에 한국군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있는 것도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인류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 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부전조약을 체결(1928)한 후나 2차 세계대전 후 인류 생존을 위해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1945)을 채택한 후부터는 국제사회가 배척해 온 안보관이다.

‘힘에 의한 평화’와 짝을 이루면서 이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소위 ‘억제를 통한 평화정책’(억제정책)이다. 억제정책이란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해 상대방이 그 의지와 능력을 믿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달리 말해서 상대방을 겁주고 위협하여 이른바 ‘도발’, ‘침공’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에 의한 평화’, 곧 억제정책을 통한 위협은 그 자체가 상대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정당화 해왔고 일본도 일본판 ‘힘을 통한 평화’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며 군비증강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결합하여 소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여기에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까지 더해져 냉전 시대의 지역별, 진영 간 대결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신냉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나토 참여에 더 깊숙이 발을 담그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이끌려가는 것과 함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관이 일본 정권의 안보관과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운용→군비증강→국방예산 증대에 매달릴수록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된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미·소, 미·중, 남·북 간 군비경쟁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정책의 산물이나, 이를 통해 안보위협이 해결되기는 커녕 확대 재생산되었을 뿐이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표방한 새로운 핵 법령을 채택(2022.9.8.)한 것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핵)선제공격을 명시한 새 작전계획 수립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크다. 북한도 경제를 희생시켜가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증강을 계속해왔으나 초 공세성을 띤 핵 교리를 도입해야 할 만큼 안보와 체제가 도리어 위태로워진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핵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최악의 초 공세적 대결 상태로 접어들었다.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가 국가와 민족을 대결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고 남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과 북한이 모두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의 하위 개념인 초 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 무기 도입 등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도 함께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와 동맹 구축,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 대만 해협 등 동북아지역의 군사대결장화와 여기에 한국군이 가담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길만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로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와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초공세적 전략은 제동장치 없는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직접적 원인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위협 부풀리기에 기초한 초공세전략으로 제동장치 없는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의 직접적 원인이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에 토대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작전이다. 여기에는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과 북한군 격멸 작전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 작전계획 5015에 따른 선제공격은 무엇보다도 불법이며, 모험주의적이고 실효성 없이 고비용만 초래한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북한이 공격 징후만 보여도 대북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는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4조와 무력 침공을 부정한 헌법 5조, 선제적 무력 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국방부와 군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징후를 보였을 때만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한미연합군으로서의 북한의 어느 미사일에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 4D 작전을 전개해야 하므로 전면적인 선제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군을 격멸하겠다는 것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북한군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살상으로 이어져 전시국제법(헤이그법)의 위반으로 된다. 전시국제법의 원칙을 제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1868)은 “한 국가가 전쟁 중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전시 불필요한 과잉 살상을 막기 위한 헤이그법 원칙 중에서도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는다. 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은 “이러한 목적-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을 위해서는 병력(부대)의 주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북 선제공격은, 설령 제한적인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도, 반드시 전면전으로 비화한다. 북한이 이미 남한은 물론 일본과 태평양 미군 및 미 본토까지 보복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남북한의 모든 생명과 자산, 미·일의 일부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자 작전이다. 한미연합군이 제 아무리 대북 정찰 능력을 강화해도 산악지대 등을 이용해 은폐·엄폐된 고정식 발사대와 수

백 대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모두 탐지해 발사 전에 파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분명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략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구축에 2017년~2022년에 약 30조 원(국방부 발표 액수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썼고, 2023~2027년에 30조 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신원식 의원실, 2022.10.21.)이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북한도 계속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며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고 핵 선제공격을 표방한 ‘핵 법령’까지 채택함으로써 남북이 안보 딜레마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고착되는 형국이다.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이 안보를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킨다는 방증이다.

2023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169억 원이다. 이 예산 대부분 대북 선제공격용 최첨단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에 사용된다. 이른바 ‘3축체계’ 수행을 위한 무기 도입비는 는 약 31%인 5조 2,954억 원(연합뉴스, 2022.12.24)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방위력 개선비의 약 31%에 상당한다.

최첨단 고성능 공세 무기 도입은 국내 개발이든 외국산 구매든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도입비의 최소 4배 이상(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2019.10.7.)의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들어간다. 국내 개발 중인 KF-21 사업 예산은 무려 18조에 이르며 운영유지비는 얼마가 소요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 F-35A 40대의 운영유지비는 40~80조 원(홍영표 의원,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2019.10.7.)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10~20년 후에는 국방예산 대부분을 고성능 첨단무기 운영유지비에 쏟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을 방어전략과 작전으로 전환하고 방어전략과 작전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방위력개선비와 운영유지비를 50% 이하로 줄여 국방예산을 크게 삭감할 수 있다.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을 폐기하고 방어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그것이야말로 헌법과 국제법 준수로 민족의 공멸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대전제요, 국방비 삭감을 통해 국민경제와 민생을 도모하는 길이자 판문점/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의 준수와 이행으로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기도 하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전력증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

문재인 정권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전력이 증강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매달려 집권 내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 군비를 증강했다. 이른바 '3축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2021년에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내내 헛물만 켜 꼴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가 낮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VOA,2022.5.7)에서 “감시·정찰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작권 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군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MD 능력의 고도화를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전작권 환수 조건이란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에 따르면 첫째,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능력을 갖춰야 하고 셋째,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 검증 목록과 기준 관련 문턱이 높아지는데다 3번째 조건은 그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한미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작권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도 능력과 조건에 매달리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실 군사적 능력을 전작권 환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미 한국군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2010.6.27)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조건에 매달리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전력 보강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11~14조 원(3축 체계 예산과 국방개혁 명목 비용 포함)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으며, 이 비용이 방위력 개선비의 80%를 넘어설 정도로 국방 예산 팽창의 주된 요인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의 투자가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기는커녕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 있다.

이에 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적 능력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성에 맞게 주권과 헌법 수호, 국가 자주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이 제시하는 검증 기준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 양해각서'와 문재인 정권의 '연합 방위지침'을 폐기한 후 작전권 환수를 선포하면 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국내법/국제법적 제약이 없으며, 군 최고 통수권자의 선언만 있으면 된다.

나아가 선제공격전략과 작전을 폐기하고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작전통제권 환수의 길을 더 크게 열 수 있으며 환수된 작전통제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다. 초공세적 (핵)전쟁계획하에서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으로써 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명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들여온 최첨단 고성능 공세 무기의 운영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예를 들어 F-35/15K나 세종대왕함 등 링크-16에 의해 운용되는 한국군 최첨단 고성능 무기는 통신수단을 비롯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작전권 환수 의의를 반감시킨다. 방어적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무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을 한반도 작전환경과 한국군 특성에 맞게, 또한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맞게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남북 간 군비경쟁 지양과 국방예산 삭감, 군축의 길도 열린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 동원 가능성과 국방예산 팽창

2023년도 방위력 개선비에는 한국군의 역외작전을 위한 전력 도입비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대형 수송함, 대형 구축함, 중형 잠수함,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대형 수송기,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상륙공격헬기 등이 대표적인 무기체계다. 2023년

도에 이들 무기 도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만 약 1조 8,429억 원이다.

그러나 이들 전력은 대북 방어에는 별 쓰임새가 없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대결에 동원되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쓰일 무기체계다. 한국 해·공군은 현재도 하와이,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미국과 연합훈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만약 한미위기관리 각서가 개정되어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국 해·공군의 동·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작전 연습 참가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장비 도입도 더 확대될 것이다.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막판 끼워넣기 된 신규 도입사업 예산 4,400만 원이 편성된 SM-3 요격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최소 100km 이상으로 남한 방어용이 아니며 일본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겨냥한 북·중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SM-3 블록 II-A는 요격 고도가 최소 800km에 달해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ICBM을 상승/하강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발달 가격이 무려 480~560억 원을 호가한다. SM-6 요격미사일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무용지물이나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미 항모전단을 방어하는 데서는 유용한 무기체계다.

특히 한국의 중대형 구축함과 중형 잠수함 등의 함대지 전력은 양안 분쟁 시 미국의 요구로 미국과 대만 지원에, 미·중 분쟁 시 미국을 겨냥한 중국 북동부 지역의 ICBM 발사 기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 또 서해에서 남하하는 중국의 북해함대 전력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남한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무력 침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과 미군의 남한 방어 지원을 조건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거는 도박과 같은 미친 짓이다. 한국군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포위전략에 동원되는 것만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한다.

한편, 2023년도 국방예산 전력유지비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분야 중 주한미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방위비 분담 예산 1조 911억 원, 주한미군 시설부지 지원비 102억 원, 주한미군 C4I 체계 및 위게임 모델 사용료 266억 원 등 총 1조 1,279억 원이 있다. 해외파병비용 501

억 원, 한미연합연습 115억 원, 해외연합훈련 145억 원도 주한미군이나 미군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력유지비 중 ‘군수지원과 협력’ 분야 외화 예산은 14.7억 달러(정부 예산안 기준)로 이중 약 80%(1조 5,170억 원, 2023년 예산환율 1,290원 적용)가 미국에 지급하는 해외정비비 등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 650억 원, 평택기지 이전 비용 1,424억 원 등도 미군을 위한 전력유지비에 포함된다. 카투사 관련 비용 192억 원(2018년 기준, 2020 국방백서)도 주한미군 지원 경비의 일환이다. 이에 2023년에 미국과 주한미군에 지급되는 비용은 약 2조 9,476억 원으로 전체 전력유지비의 17.5%에 해당한다.

이외 방위력 개선비 중 외국 무기 도입비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17.7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미국산 무기 도입비는 통상 80%인 1조 8,266억 원에 달한다.

매년 증감이 있지만, 전력유지비와 방위력 개선비에서 연평균 약 4.8조 원(국방예산의 8.4%)이 미국과 미군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여기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외 타 부처 예산에서 지출되는 기지 정비비 4,971억 원 (2018년 기준, 『2022 국방백서』), 미군기지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세제감면 등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비 1조 1,469억 원(2018년 기준, 『2022 국방백서』) 등을 포함하면 미국과 미군 때문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6.4조 원을 넘는 셈이다.

그러나 대미 군사적 종속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부담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력운영비 40조 원 중 상당한 액수가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작전계획 5015의 수행을 위한 대군 체제와 최첨단 고성능 무기체계 유지에 사용된다. 이에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고 방어 위주의 작전계획을 수립해 병력과 최첨단 고성능 무기의 유지비를 1/2로 줄인다면 2023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전력운영비 약 40조 원 중 20조 원을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 대결정책과 한반도 역내외에서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미일 등 양자·다자연합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힘에 의한 대북 압박은 위기와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할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분단을 연장할 뿐이다. 따라서 힘에 의한 대북 압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

영,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이는 이 시대 최고의 국가와 민족의 가치이자 이익인 자주와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초공세전략을 앞세운 북미, 남북 대결 속에서는 만성적인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없다. 동북아에서의 긴장 완화가 자국의 패권과 대중국 포위전략을 약화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조차 받지 못하는 미국,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필요로 하는 미국을 해바라기 해서는 결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단호히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열린다.

북한이 핵 법령을 채택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폐기하고 핵 선제공격으로 돌아선 데는 더욱 강화되는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적 강압 정책과 선제공격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미가 선제공격전략인 작전계획 5015와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계획을 포기하고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해 북한의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은 얼마든지 다시 열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법령 채택 후 가진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 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핵 포기 입장을 밝혔다. 곧 북한 체제가 위협받지 않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조성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기 전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따른 방어전략 수립과 후속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을 통해서 공세 전력을 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면 현재의 비대한 대군 체제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국방예산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길 외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 명언이야말로 부전조약과 유엔헌장 채택 이래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국제사회를, 평화의 한반도를 구현하고자 한 인류의, 민족의 염원에 화답하는 생명과 희망의 소리다. 국회마저 맹목적인 군비증강의 들러리가 된 지금 군비확장을 막고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 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 주체는 국민뿐이다. 

공주대학교에서 한국원폭피해자와 한반도 핵문제를 알리다!

이애지 청년회원



4년 동안의 대학생살을 마무리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학생 신분으로 하는 마지막 아카데미였으며, 또 저를 통해 평통사 회원이 된 소영언니와 함께 하는 첫 청년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졸업준비와 취업준비로 정신이 없던 저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아카데미를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내에서 한국원폭피해자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1세, 2세, 3세 분들의 투쟁 활동을 담은 사진전, '한국 원폭피해자분들에게 한마디',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 등의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알고 있는 학우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원폭피해자를 알게 된 학우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핵무기를 폐기하자' 등의 말을 남기며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해보니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리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현 상황도 학우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카데미를 기획하였지요.

두 번째 아카데미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핵문제 : 한반도 핵대결,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동안 배웠던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원자폭탄이 절대 광복의 상징이

<편집자 주> 2022년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공주대와 논산평통사, 전남대, 성공회대에서 진행한 아카데미를 직접 준비하고 발표한 참가자들의 소감글을 실는다.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히 정리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시간 준비한 탓에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해준 분들에게 원자폭탄이 광복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원폭피해자,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알게 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기를 기대해봅니다.

금소영 청년회원



공주대학교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습니다. 짧지만 지난 날 평통사에서 경험한 활동들을 많은 노력을 담아내어 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려해줄 것이라는 마음을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어려워 첫 번째 공주대 아카데미는 청년회원인 애지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카데미가 진행 중인 장소에 간 저는 자연스레 합류하고 있었고, 다른 일정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하는 순간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애지와 함께 이야기하며 이번 아카데미의 의의와 새롭게 들려오는 아카데미 제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요리조리 굴러다니는 생각들을 더 다양하게 키우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픈 마음으로 시작했던 평통사 활동의 처음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금이 아니면 학교에서 아카데미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아카데미를 해보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틈틈이 생각하고 공부도 하면서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원폭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핵 대결 문제, 총 두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애지와 각각 한 가지의 주제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중요한 과정을 되새기며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반도 핵대결’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지난 날 배웠던 공부도 되새기고, 얼핏 보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마터면 편협한 사고로 갈 수 있거나, 무지한 상태로 지나갈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며 내용을 바로 잡고 의미를 더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에게 어려운 단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순화시키는 것,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짧은 발표시간 안에 쉬우면서도 핵심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빈틈이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월 1일 아카데미 당일, 홍보시간이 부족해 생각보다 참여자들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준 분들을 위해 말하고자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분명히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보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또 뿌듯했습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자들이 던진 질문들을 받기며 적극적으로 응답한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년 간 함께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기 전, 학교에서 새로운 의미를 남길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부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통사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기후위기시대, 핵문제와 먹거리 문제 :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강효민 청년회원



지난 11월 29일 논산에서 진행된 청년 평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강효민 청년회원

작년 겨울 평화아카데미를 통해 평통사의 활동을 접하고, 청년모임인 청출어람에 참여하게 되면서 평화와 안보에 관해 공부하게 된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꾸준한 학습으로 생소하던 안보와 관련된 용어도 익숙해지고,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 활동가들의 남다른 열정과 도움으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논산에서 준비하게 된 평화아카데미는 실천과 학습을 통해 공

부해온 내용들을 담아낸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시대, 핵문제와 먹거리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9일(화), 논산에서 진행된 2022 청년평화아카데미 강좌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통사의 청년회원이자, 아이들의 엄마이자, 생협의 활동가입니다. 아이들의 보호자가 된 이후, 나를 포함한 아이들의 미래에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주제로 다루고자한 기후위기와 안보문제, 먹거리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주제들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 아카데미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룬 기후위기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많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를 막아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예측하는 지금,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핵)전쟁위기를 다루었습니다. 전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제공격 전략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연습이 연일 계속되자, 북한 역시도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신헌법령을 내놓았습니다. 힘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압박할수록 강도 높은 대응으로 맞서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힘에 매달릴수록 안보는 위태로워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언제든 지면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핵전쟁 위기가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곳 한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전쟁위기 문제를 기후위기와 연결지어 보면, 전쟁은 국제적으로 지탄 받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전투기, 전함, 탱크, 군용차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덩어리입니다. 또한 총알과 화약, 폭탄과 같은 무기들도 원재료 추출에서부터 생산과정, 훈련과정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부문 탄소배출량은 공공분야 탄소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영역인 군사부문이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활동 자체가 기후위기의 주요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국가안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국제적인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군사부분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진정으로 기후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식량위기와 먹거리안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은 식량문제일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는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 지구적인 식량부족과 기아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안과 실천 방안은 명확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와 새로운 평화시대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활동 축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서 안전보장 선순환을 도모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위험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평화에 한 발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평화를 준비한 나라가 바로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나라이자, 자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군대를 없애고 주변국을 향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방비로 나가지 않게 된 예산을 복지와 교육, 그리고 환경에 사용하면서,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꿈 같은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으로 논산에 입주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논산에 입주 예정인 KDI(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국제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있는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열압력탄, 백린탄 신관을 생산하는 방산 업체입니다. 이에 논산 평통사를 중심으로 KDI입주를 반대하는 진행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에 불법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번 아카데미를 마무리했습니다.

평화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논산에서 준비한 청년평화아카데미 역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다 : 기억하는 청년들의 연대, 반핵 평화로 한걸음

구가연 청년회원

아
카
데
미



12월 2일, 광주에서 진행한 청년평화아카데미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12월 2일, 벌써 12월이 되어 한 해가 끝나간다는 감회 속에서 광주청년모임의 청년들이 열심히 학습하고 준비해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열게 되었다. 전남대에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기억하는 청년들의 연대: 반핵 평화로 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한국원폭피해자 2세인 한정순 선생님과 2세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매해 열리는 청년아카데미이지만 늘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참여만 해왔지, 아카데미를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건 처음이었다. 아카데미를 열기까지는 많은 준비과정과 여러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광주 청년 모임은 올 한 해 동안 한국원폭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만큼, 주제는 쉽게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를 선정할 뒤에도 아카데미를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울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등등에 관한 고민과 의논의 시간을 거쳐

야 했다. 행사를 위한 실무적인 일도 준비할 것들이 많았다. 전남대 강의실을 대관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학내 곳곳에 붙이고, 현수막을 걸었다.

당일에는 광주 청년모임원들과 함께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가 오늘에야 드디어 끝난다는 해방감과 준비한 것들을 잘 선보일 수 있을지, 사람들은 많이 와 줄지 하는 걱정과 함께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오전에는 야외에서 한국원폭피해 역사를 소개하는 사진전을 열고, 원폭피해 어르신들께 전달할 포스트잇 메모도 모으며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간단한 부스를 열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원폭피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스에 참여해 주었다.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모임원인 규리안이 한국원폭피해 문제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첫 발표를 하였다. 뒤이어 내가 한국원폭피해 문제가 여태껏 한국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유와 지금까지 활동해 오며 느낀 점들을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원폭2세환우회를 이끌고 계시는 한정순 선생님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잔인한 내림> 편집본을 함께 시청하고, 한정순 선생님과 청년들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정순 선생님께서 피폭으로 인한 질병과 유전의 문제와 그로 인해 선생님이 겪으신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한정순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느껴져서 주최자로서 뿌듯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인원폭피해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특히 우리 또래인 청년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아카데미를 기획하였다. 우리의 소망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루어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모임원들과 더욱 돈독해지고 한국인원폭피해 문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어 보람이 있었다. 

어흥! 성공회대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힘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기

김채린 청년회원

아
카
데
미



11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진행한 청년평화아카데미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지난 11월 22일(화), 학내 소모임 '어흥'이 주최한 청년평화아카데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힘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성공회대에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고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재 억제전략을 강화하며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가 군비경쟁과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한편 아카데미에 참가한 가톨릭대학교 인권위원장은 한국원폭피해자문제 등 인권의 측면에서 평화에 대해 발표했다. 성공회대와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무엇보다 이번 아카데미는 준비부터 발표, 섭외 등 ‘어흥’ 친구들이 역할을 맡아 진행했다. 친구들은 그동안 학습했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고, 최근 북한의 신 핵법령, 한미의 대북억제정책 강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욱 깊이 학습했다. 또한 인근 대학인 가톨릭대학교의 인권위원회에도 아카데미를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몇 차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피피티 만들기, 어흥 소개 연습하기, 조직하기, 전체 진행 짜기, 현장 준비 등 어흥 친구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

아카데미를 끝마치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사실 처음에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밀려 왔다. 하지만 발제를 하고 발표를 끝내고 난 지금, 내가 발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아쉬움이 남기보단, 나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과 기쁨이 남는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은 우리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힘에 의한 평화’에 열을 올리는 한미당국이 선제공격작전을 반영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실시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북한 역시 선제공격을 암시한 신 핵법령을 발표하며 ‘힘에 의한 평화’에 나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 남북 군사대결과 긴장이 고조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높아질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실제 지난 10월 31일, 한미가 진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스톰)을 시작으로 남북은 누가 더 강하게 대응하는지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군사대결에 나섰다 그 결과,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최고조로 달했던 사례를 들어 ‘힘에 의한 평화’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에게 내가 느낀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불안을 전하며,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간 상상하기도 싫고 현실이 되어서도 안 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69년 동안 이뤄진 분단과 그로인해 계속된 군사적 긴장 상황에 무뎌져 ‘설마 전쟁이 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근본적으로 한미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중단하고, 대북억제정책을 폐기할 것과 북한 역시 신 핵법령을 폐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며, 그 예로는 2018년에 이뤄진 판문점, 평양 선언을 소개했다. 판문점, 평양 선언을 통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기약했고,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의 방안을 이야기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잘못된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평화를 위한 목소리 내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그리고 나부터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청년평화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에 의한 평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한 발을 내 딛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 광주, 목포, 나주, 해남 평통사

기억하는 청년들의 연대, 반핵 평화로 한 걸음!



12월 2일(금), 전남대학교에서 '기억하는 청년들의 연대, 반핵 평화로 한 걸음'을 주제로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발표에 이어 한정순 원폭피해자 2세분을 모시고 원폭 피해자들의 현황과 선생님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정순 선생님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청년들이 있기에 힘들더라도 힘내서 원폭피해자 운동을 하신다며 격려해주셨습니다. 광주 청년회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진행



12월 15일(목),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기는 청년 활동가가 어떻게 평화통일, 핵문제에 대해 고민을 키워 오게 되었는지 강의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2부 프로그램으로는 OX 퀴즈와 감정카드로 평화통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소감에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 좋았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몸이 피곤해서 졸면서 듣는 게 아쉽다. 모두에게 필요한 수업 같다. 앞으로 계속 이런 수업을 종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 참여와 지력산 레이더 배치 항의방문!



12월 7일(수), 광주 군공항 이전 함평군 농민회 설명회와 12월 8일(목), 진도 지력산 대책위 계룡대 공군본부 항의방문에 참여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함평군 농민회 차원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현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의 성격과 위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응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목), 지력산 레이더 배치에 대한 항의를 위해 진도 지력산 대책위에서 계룡대 공군본부로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최근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뒤 계룡대 공군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진도 지산면 대책위 김영화 공동위원장은 "지력산은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농사짓는 물이 시작되는 생명의 터다. 지력산에 23,000명을 파괴하는 레이더 기지 절대 반대한다." 특히 "이 레이더가 미국, 일본의 방어를 위해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 기지가 명확하기에 더욱 반대한다."는 취지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나면 총알받이 지력산 레이더 막아내자!", "초강력 전자파 지력산 레이더 저지하자!", "생명의 터, 지역의 상징 지력산을 보존하자!", "미국과 일본위한 레이더 기지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동석|

♥ 김제모임

김제 황산되찾기 평화발자국 리본달기, 월례모임



12월 9일(금), 김제 부영3차아파트 일대에서 회원들과 함께 “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매월 리본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원 월례모임에서는 유정섭 팀장의 설명으로 MD와 천궁(한국형 MD)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만약 황산에 천궁 요격 무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는 결국 사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제 황산되찾기 평화발자국



11월 16일(수), 김제시의회 황배연 부의장이 김제시의회에서 김제황산에 대해 군사보호 해제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황배연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황산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김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정덕

♥ 군산평통사

군산평통사 운영위원 송년회, 원팀을 향하여!



12월 15일(목), 운영위원들과 군산 회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통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올 한해의 소회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뜻 있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를 군산평통사와 함께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23년에도 군산평통사가 원팀이 되어 평화 통일 운동에 더욱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비를 내어주신 훈남 유승기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사회의 유대를



12월 16일(금), 옥산 힐링센터에서 엔터테인먼트로도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이진우씨가 감독한 영화 ‘휴가’와 김수호씨가 촬영감독한 영화 두 편 ‘휴가’, ‘월명동 김씨 아저씨’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이신 고통우씨가 음향감독으로 참여했고, 김상영, 진인하, 이진우, 김수호, 고통우씨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 다수의 평통사 회원이 시사회장에서 조우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사회의 유대를 실천하고 계신 평통사 회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 12월 생일 맞은 회원님들 축하합니다.

강임숙, 권태근, 김수진, 문정숙, 박형선, 임춘희, 정란, 정성빈, 조판철, 최웅진, 김성수, 김유진

최소영

♥ 논산평통사

사드 반대, 한미일MD 동맹 구축 반대, KDI 논산유치 반대 평화행동



12월엔 좀 부족했지만 일상적 평화행동으로 출퇴근길에서 사드 반대, 한미일MD구축 반대, KDI논산 유치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11월 26일(토), 논산민예총에서 준비한 ‘논산시민평화대동한마당’에서 KDI논산 유치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박진서군과 이해천, 이애지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 홍보물을 꼼꼼히 읽어보는 시민들이 있어 힘이 났습니다.

논산평통사 후원의 밤~



11월 26일(토) 오후 4시부터 후원의 밤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논산 평화 시민들이 삼삼오오 정답게 모여 앉아 뜨끈한 김치찌개에 막걸리, 달콤한 군고구마를 먹으며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평화 이야기도 나누고 ‘잘했다’ 서로 칭찬도 해주면서 평화의 흙씨로 잘 살아내라고 마음과 힘을 보태는 후원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후원금의 일부는 평통사 사무실 마련을 위한 씨앗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유제춘, 배꽃잎, 이정현, 최수현, 김광섭

청년평화아카데미! “핵무기와 먹거리문제 : 우리아이들의 미래는?”



11월 29일(화), “핵무기와 먹거리문제 : 우리아이들의 미래는?”이란 제목으로 강호민 청년이 청년평화아카데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30여명의 참가자들이 강연을 경청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핵문제 그리고 코스타리카를 예로 들면서 대안 사회의 비전까지, 잔잔하면서도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한 강호민 청년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논산에서도 청출어람과 같은 청년조직이 세워지기를 꿈꾸어 봅니다.

|변혜숙

♥ 부천평통사

사드 완전정복을 향하여!



참 여러 차례 사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드 성능개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소성리 어머니들을 짓밟고 무력행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을 지키고 일본을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번에는 퀴즈 형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우리가 하는 공부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실천이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정숙

뚜벅뚜벅! 소성리 평화행동



매일 새벽 소성리에서는 “불법 사드기치 공사 중단! 공사장비 및 자재 반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6시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우리들은 어머니들과 함께 길 위에 앉아 아직 새까만 어둠과 온몸을 시리게 만드는 추위에도 사드철거와 한반도 평화의 송고한 몸짓과 외침을 변함없이 이어갑니다. 뚜벅뚜벅! 계속하는 데에서 평화가 마침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국 회원워크숍 참가



12월 10일(토), <사드 성능개량의 의미와 평통사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전국 평통사 회원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사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사용할 단거리미사일이 아닌 미일을 향해 날아가는 북중의 중장거리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임을 상기하면서 “사드는 선제공격이며 확장억제이며 동맹”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사드철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회원공부시간을 통해 워크숍 전에 몇 차례 이루어진 사전 학습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습니다.

청년평화아카데미, “여성, 어머니, 사드투쟁을 통해 평화의 주체가 되다!”



2022년 청년평화아카데미 <여성, 어머니 사드투쟁을 통해 평화의 주체가 되다!>가 12월 15일 (목), 저녁 7시 30분 김천 교육너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외유내강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드철거 투쟁에 앞장서 온 최현정 회원이 이화연 청년과 함께 90여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사드가 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지 못하는지와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투쟁하는 삶의 모습 등을 따스한 눈물과 웃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주민과 평화지킴이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12월 16일(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소성리 불법 사드철거와 공사중단 활동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민과 지킴이 37명을 일반도로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 앞서 소성리 주민들과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이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법정에 선 회원들과 주민들은 사드배치의 불법성과 사드배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의 위협을 조목조목 밝히며 더 이상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앞세워 소성리를 짓밟지 말아야 함을,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사드철회 투쟁을 할 것임을 단호히, 그리고 의연히 강변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찬수 대표를 비롯하여 구자숙, 은영지, 이동욱, 이미경, 최현정 등 대구평통사 회원들과 이석주 이장님 등 성주주민들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월 3일(금) 오전 10시입니다.

|김종희

♥ 대전충청모임

대전평통사(준) 송년모임 진행



12월 16일(금), 대전평통사(준)가 월례모임을 겸하여 송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전현충원을 둘러보며 여성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손기정 선수, 함석헌 선생 등 독립운동가와 사회공헌자들의 삶에 대해 듣고 묵념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비 내용 중에서 “이 땅의 독립운동가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통일을 위해 목숨 걸지 못한 것이 첫 번째요.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세 번째다”라는 조문기 의사의 어록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어 김연순, 조룡상 회원이 개업한 ‘cafe 소풍’에서 개업 축하를 겸하여 ‘주변국 위협론’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평통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회와 덕담을 나누고 송년모임을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성·서천·충북·천안아산모임에서 남북 군사력 비교 공부



각 지역에서 <2021년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 책자를 기초로 ‘위기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유지의 허구성을 살펴보고 제 바그루트 책기에 급급한 국방부와 군의 행태는 국민들을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사강대국이 아닌 평화와 문화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영재

♥ 성남용인모임

회원공부 모임



11월 11일(금), 박석분 부산 상임운영위원의 설명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사업”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성남지역 종교 및 풀뿌리 사회단체들에게 민간법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를 제안하기로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SCM 평화행동 참가!



11월 3일(목), 한미안보협의회의 규탄 대통령실 앞 평화행동에 최병철 회원이 참여해 확장억제 정책과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서덕석

♥ 보령평통사

소성리 지킴이 평화행동



11월 22일(화), 소성리 지킴이 평화행동에 보령평통사가 참여하는 날이었으며 권진복, 김영석 두 명의 회원이 소성리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드가 철거되기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염원하였습니다.

장동혁 의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인시위 진행



11월 23일(수), SM-3 미사일 도입예산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앞장선 보령의 국회의원 장동혁 의원의 사무실에 보령평통사 회원들이 찾아가서 SM-3 미사일 도입예산 편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24일(목)부터 29일(화)까지 6일 동안 장동혁 의원사무실 인근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령평통사 정례모임



11월 22일(화), 1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례모임 겸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유영재 지도위원의 지도 아래 SM-3 미사일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사드에 이어 SM-3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한반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며 결국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령평통사 신입회원 교육



12월 6일(화), 신입회원 5명과 회원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영재 지도위원이 농민회관 3층에서 신입회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박진희 회원과 함께 참여한 문민숙님이 회원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보령평통사 회원인 추동신님의 따님 추보라님과 역시 보령평통사의 회원인 김성환님이 서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진복

41,42차 월례평화행동



41차 월례평화행동은 11월 20일(일), 강문수 대표와 8명의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회원들은 54차 SCM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42차 월례평화행동은 12월 18일(일), 강문수 대표와 10명의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12월 소성리지킴이 활동



12월 1일(목), 강문수 대표, 박석분, 신차범 운영위원, 김용판 회원이 소성리 평화행동에 참가했습니다. 평화행동을 마치고 원불교 진밭교당에서 사드철폐 기도를 올리고, 이어 사드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돌아가며 진행했습니다. 부산평통사 회원들은 12월 27일(화)에도 소성리 평화행동에 참가했습니다.

12월 회원 전체학습 “2023년도 국방예산의 문제점!”



올해 마지막 회원학습은 2023년(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서민복지 예산을 대폭 감액한 반면, 국방예산은 작년대비 4.6%나 증액한 57조 12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이 정부는 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운용을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보딜레마의 악순환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습에 참가한 회원들은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해야 함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창진 회원 월례 모임



12월 14일(수), 마창진 회원모임에서는 올해 국방예산 문제와 창원지역 무기산업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조형래 운영위원이 화물연대 파업투쟁의 의의와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회원모임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타개하고 진보진영이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에 맞서는 이론적, 조직적 토대를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원들의 염려 덕분에 천연미, 이상엽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손기종

♥ 익산

평화사랑방에 참여했습니다

전북지역 평화 사랑방 공부모임을 11월 15일(화), 29일(화)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익산, 군산, 전주, 김제 대표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참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손채자로 공부했습니다. 익산에서는 문영만 김대송 박영희 배병옥 조가비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노동자 탄압중단하고 공공사업 민영화 반대

노동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을 중단하고 전기, 공항, 철도, 수도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 사업을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에 1인시위를 통해 공공사업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1월 12일/19일/26(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을 하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대송|

♥ 서울평통사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 기자회견 참가



일본 기시다 정권이 소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12월 19일(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서울평통사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이 선언에 대해 규탄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후에는 이른 점심과 차담을 나누며 친목도 도모했습니다.

온라인평화사랑방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게 된 온라인 평화사랑방은 평통사가 다루는 현안을 가지고 꾸준히 월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온라인 사랑방은 28일(수),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이 날은 지난 온라인 사랑방에 이어 2023년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 총론을 계속 공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촛불 참가

12월 16일(금), 이태원역 1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촛불에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한 추모촛불은 9시가 넘어서 대통령실에 향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작했고,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결국 향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곽민진, 이보혜 엘리샤벳, 이수현, 김창원, 이산하

|황윤미|

♥ 인천평통사

사드 완전정복! 온라인 평화사랑방



12월 온라인 평화사랑방은 사드 완전정복을 주제로 인천과 대전에서 주관하고 다른 지역 회원들과 함께 3차례 공부했습니다. 미사일방어(MD)와 사드 기본 내용과 성능개량의 문제점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사드는 나라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사드 철거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기 위한 자기 확신과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0일(토), 대전에서 열린 전국 평통사 워크숍에는 인천 회원 열 명이 참석하여 사드 철거와 한미일 MD동맹 저지를 위한 평통사의 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2022 송년후원의 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12월 17일(토), 오후 5시~7시, 송림동 성당 강당에서 2022년 인천평통사 송년 후원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빙판길에도 불구하고 6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오랜만에 대면으로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노래공연과 판소리, 김일희 상임대표의 버나공연과 외빈춤공연으로 활기를 더해 주었고, 활동영상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청년들의 활동에 희망을 가지며, 한의사 회원분들의 한약 등 다양한 선물 나눔과 '지상의 평화' 모임에서 손수 만든 따뜻한 떡국과 음식을 먹으며 풍성한 송년 후원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 분이 회원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새해에도 평화를 준비하며 통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인천평통사가 되겠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송년후원의 밤을 위해 애쓰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드철거 투쟁 주민, 평화지킴이 탄압



12월 16일(금), 대구 서부지법에서 소성리 사드철거 투쟁 관련 주민과 평화지킴이 15명에 대한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1년에서 2년까지 구형을 때립니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세상입니다. 피고인들은 사드의 불법성,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소성리 할머니들이 방청했는데,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천평통사 김강연 사무국장, 중앙 조승현 팀장, 대구평통사 김찬수 대표 등 평통사 회원 9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2월 3일에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사드철거! 소성리 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인천 시민촛불 추모제



12월 16일(금), 오후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촛불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대표와 정경희 회원 등이 참석하여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12/11 구동훈 회원, 12/18 유한경 감사

★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이인화, 신창균, 하인희

[김강연]



평통사 <사무실 마련 씨앗기금>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3년 후에는 평통사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평통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평통사와 서울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으로 사무실(60평 규모)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평통사는 정부/기업의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100% 회원들의 회비로만 활동해 왔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자주, 평화, 통일의 한 길을 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3년 후면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용 등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평통사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씨앗기금>을 조성하여 평통사 독자적인 공간 마련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주, 평화, 통일운동의 산실! 평통사 활동의 근거지!

사무실 마련 <씨앗기금> 조성에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씨앗기금 문의] 사무처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씨앗기금 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11월]

강수혜 김강연유정섭 박석분 박영희 백금렬 유한경 이상엽 이우곤 정성임 정수경 정용진

적립기금 현재: 60,257,900원

2022년 11월 결산 보고서 (2022.11.1~11.30)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① 정기회비	31,941,000	① 업무추진비	16,040,000
② 정기후원금	2,480,000	② 운영비	7,491,930
③ 부정기후원금	797,680	보험료	2,442,870
④ 사업수입	0	복리후생비	1,700,460
⑤ 기타수입	906,800	비품비	1,148,000
⑥ 전월 이월액	13,184,270	사무용품비(소모품비)	388,300
⑦ 차입금		수도광열비	342,850
		세금과공과	0
		임대료	500,000
		정보통신비	52,780
		지급수수료	916,670
		차량유지비	0
[수입 세부내역]		③ 사업비	9,934,248
① 정기회비 : CMS(31,671,000원), 계좌(27만)		교육훈련비 ¹⁾	150,000
② 정기후원금 : 향린교회, 들꽃향린, 씨앗기금, 민간법정		국제연대사업비 ²⁾	3,247,048
③ 부정기후원금 : 김성열, 김상균, 문선경논지당, 오기성, 이보혜엘리사벳, 고산고		도서인쇄비 ³⁾	200,000
④ 사업수입 :		도서자료구입비 ⁴⁾	13,500
⑤ 기타수입 : 송금오류, 환불 등		발송비 ⁵⁾	1,096,640
		사업출장비 ⁶⁾	1,211,800
[지출 세부내역]		실천사업비 ⁷⁾	1,030,600
1)교육훈련비 : 교육장소 대관		연대사업비 ⁸⁾	107,000
2)국제연대사업비 : 민간법정 자료조사		행사진행비 ⁹⁾	0
3)도서인쇄비: 회지편집비(11월)		청년사업비 ¹⁰⁾	751,420
4)도서자료구입비: 자료구입		미디어/홍보비 ¹¹⁾	158,150
5)발송비 : 회지 및 생일카드 발송 등		회원사업비 ¹²⁾	1,968,090
6)사업출장비 : 군산,익산,김제,전주,순천,평택 조직지원		회의비 ¹³⁾	0
7)실천사업비 : SCM집중행동, 소성리 현장대응 등		④ 지원경비	8,810,000
8)연대사업비 : 소성리 달력, 비정규직 연대 등		지역교부금	8,410,000
9)행사진행비 :		지역모임지원금	0
10)청년사업비 : 청년모임, 청년평화아카데미 등		자원활동가 지원금	400,000
11)미디어/홍보비 : 페이스북 광고, 메일링, 망고보드		⑤ 부채상환	0
12)회원사업비 : 회원관리프로그램, 전남회원사업비, 경조사 등		⑥ 예비비	0
		⑦ 씨앗기금 (사무실보증금적립금)	640,000
		⑧ 민간법정 기금	0
		⑨ 잔액(월말통장잔액)	6,393,572
수입 합계	49,309,750	지출 합계	42,916,178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goodpeace@nate.com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연 락 처 : 010-9590-1490 김영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5092-0365 김유욱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논산평통사

주 소 : 3291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4길 5
연 락 처 : 010-4488-7152 이도구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중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2009@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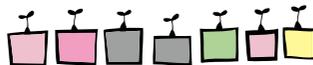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평통사(준)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자문변호사 강대성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이남진 이덕우 장경욱

발행일 2022년 12월 27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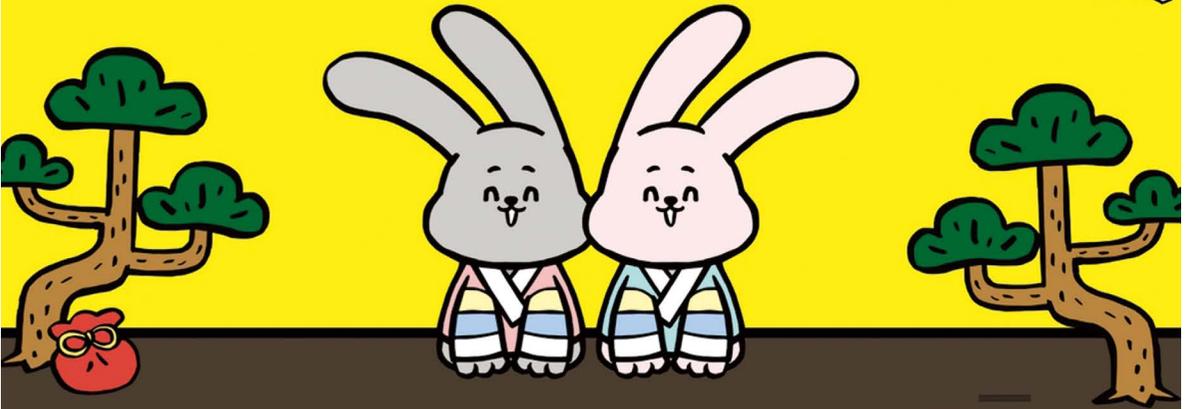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안에 담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23년 새해에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뚝뚝뚝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CMS자동인출 또는 공식계좌(기업은행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를 통해 정기 또는 일시로 후원한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회원가입 시 성명,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문의

평통사 사무처 :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정부, 기업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100%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